

# 고준위방폐물법·풍력법 처리 공감대

### 여야,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저장시설 절충안 모색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쟁점 대치에 5월 국회 여부 미지수

25일 여야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 (풍력법)을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물법과 관련,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며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고,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처리를 원했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

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여야는 그동안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대립했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했고,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실제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으나 여야는 이번에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여야는 풍력법도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처리하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두 법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21대 마지막 임시회의인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인 여야는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국힘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

### 제한적 권한·전대를 이견 부담 박진 등 고사...29일 당선인 총회

4·10 총선에서 패한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 때까지 당을 이끌어 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선자·낙선자 등의 등을 거쳐 비대위가 '혁신형'이 아닌 정당 대회를 신속하게 치르기 위한 '관리(실무)형'으로 꾸리기로 방향을 잡았다. 25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당 중진들은 간담회를 열고 4·5선 이상의 현역 의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중진 인사들도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을 사양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다음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대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에는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고작 2개월 안팎에 그치고,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사이를 중재해 불을 확정한다는 부담도 커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국회 부의장,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선출

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 등이 있다. 4선까지 포함하면 중진 당선인은 19명이다. 이러한 구인난 속에 윤 권한대행은 일부 낙선한 중진 의원까지 접촉 중이다.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 서울 서대문에서 낙선한 박진 의원이 최근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낙선한 4선 이상 중진은 박 의원 외에도 서병수, 홍문표, 이명수, 김학용 의원 등이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인난인 것은 맞다"며 "중진들의 경우 개인 거취 문제도 있고 실제로 비대위원장을 맡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당선인 총회를 열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이 이번 주말까지 비대위원장을 내정하면 이날 총회에서 당선인들에게 누구를 지명했는지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 이때까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진행 상황은 당선인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선이 끝내 안 될 경우 결국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국회 열어 '채 상병 의혹' 밝혀야" 국회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국회운영위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오늘까지 원내대표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은 25일부터 26일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원내대표 후보로 입후보한 이들은 3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대상 워크숍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어 다음 달 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이 완료되면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사령탑이 결정된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지난 21일 강성 진명(친이

재명) 성향인 박찬대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아직 추가 도전자가 나오지 않았다. 물망에 올랐던 김민석, 김성환, 서영교 의원 등이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친명계 주자 내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 1명만 단독 출마할 경우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진보당·새진보연합 당선인 4명 '원당 복귀'

### 더불어민주연합, 출당·제명 조치...민주, 10명 합류해 171석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 합류했던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당선인 4명이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다. 민주연합은 25일 국회에서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혜경·전종덕(진보당), 용혜인·한장민(새진보연합)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돌아가

게 된다. 운영덕 공동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들은 민주연합이 확장한 민주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당론을 위배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로 제명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민주연합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합당 절차에 들어갔고, 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으로 공천받은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가 추천했던 서미화·김윤 당선인 2명은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수는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더한 171석이 될 전망이다. 윤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맹점을 활용한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이고, 국민의 여러 이해가 온전히 민의의 전당에 반영되도록 22대 국회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육사 내 독립 영웅 흉상 영구 존치해야"

### 민주, 육사 찾아 기자회견

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위는 25일 육군사관학교 내 흉비에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영구 존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받든다면 역사 왜곡을 중단해야 하며 그 첫 시작은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완전 존치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에는 특위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과 독립투사 후손인 우원식·박찬대 의원 및 김용만 당선인

(경기 하남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윤후덕 의원 등이 자리했다. 특위는 "이번 총선 민심은 역사 이념 전쟁을 계속하려는 대통령의 독단을 단호히 심판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통합에 반하는 시도를 매섭게 심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서부터 이어진 국민 명령을 받들어 결의안 내용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